개방 · 경쟁 · 자율의 '97년 정보통신 정책

형 태 근 정보통신부 정책과장

머리말

IMF 구제금융이 국내경제 전반에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낮은 성장이 대량실업을 예고하고 금융불안의 장기화로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98년 WTO 체제에서 개방과 자율의 기치를 세워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온 정보통신에 미칠 여파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은 사실 정보통신만 두고 보면 희망과 자신이 넘친 한해였다.

WTO 기본통신 협상과 대미통신협상의 원만한 타결,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방안 수립,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보통신부의 역할 재정립 등 역동적으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97정보통신이 겪은 주요 쟁점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 보기로 한다.

WTO 개방체제 대비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통신사업 경쟁확대

제2 시내전화사업자와 시외전화 등 10개 신규사업자를 허가하므로서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의 단계적 경쟁체제 구축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유·무선 서비스 부문별로 3개사업자의 경쟁구도가 갖추어졌다. 시장진입을 완화, 사전공고제도를 폐지하여 98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적 시장환경의 특성상 사업준비기간이 필요한 신규서비스의 경우 가허가를 줄 수 있게 하였다. 외국인 지분한도를 98년부터 유·무선 33%까지 확대하고 99년부터 대주주도 허용하여 본격적인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사업기반 조성 지원

PCS 3사, 하나로 통신, TRS, 무선데이타 등 신규사업자의 사업기반 조기구축은 국내통신시장의 효율성 증대의 관건이다.

97년 10월 PCS 3사 서비스 개시 등 순조롭게 사업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기지국 공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기지국에 대해 67%까지 전파사용료 감면을 제도화 하였다.

단말기 무료제공 등 일부 과당경쟁의 양상이 있으나 98년 본격 서비스 시점에서는 점차적으로 경쟁 질서가 잡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

통신요금 결정의 신고 원칙, 인가 예외를 확대하여 유효경쟁이 확보되어 공정경쟁 우려가 적은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 통신요금의 자율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중에 있다.

실질적 독점이나 약탈적 가격 설정이 우려되는 시내전화, 이동전화도 2000년까지 경쟁이 도입되면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전문성 강화, 경쟁력 향상, 효

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겸업은 자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중이다.

한편, 역무별 경쟁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방지와 시정을 위해 통신시위원회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상임위원과 사무국 설치로 조직을 강화하고 이용약관과 상호접속감시 등 주요 임무를 시작하였다. 사업자간 분쟁해결과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장거리전화 시장의 경쟁유효성을 제고하였다.

별정통신사업자 제도 신설

회선설비를 빌려 전화 등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과 구내통신사업자 제도를 신설하여 경쟁활성화와 가입자망 고도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음성재판매, 인터넷 폰 등 재판매 사업은 설비보유재판매, 설비미보유, 단순재판매로 세분하여 자본금 규모 등 등록기준을 달리하였다.

외국인의 참여는 99년 지분 49%까지, 2001년부터 100%허용된다.

한국통신 경쟁력 강화 추진

지난 10월 발효된 공기업 특례법에 따라 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주협의회를 두어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였다. 사장을 공모하여 비상임이사 중심의 사장선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뽑도록하여 정부의 경영에 대한 간여를 없앴다. 한국전화번호부(주) 등 자회사 민영화도 추진하였고 인력, 조직 및 재무관리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였고 114 안내의 유료화로 시내부문 적자해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도화

전국전화사업자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다.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과반수 임명을 의무화하였다.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용을 돕기 위해 대주주 13인 이내, 소액주주대표와 우리사주대표가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두어 소유와 경영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전국전화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주주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 수립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 발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과 불량서비스로부터의 보호를 기하는 한편 통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재도를 수립하여 98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행초기 공신력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자율적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망 고도화 추진 방향 개선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조기구축

종래 2015년 완성키로 하였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2010년 조기구축하기로 계획을 단축하였다. 유·무선, CATV망, 위성망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초고속망을 구성하고, 특히 기술발전의 추이를 전방위로 수용하여 기존 전화선을 활용하는 xDSL 방식의 가입자망 고도화를 통해 구축 예산도 기존의 45조원에서 32조 규모로 대폭 줄였다. 국제통신망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여 21세기 아·태지역의 HUB를 지향하는 해저 광케이블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망 구축 2단계사업계획 확정

2010년까지 공공재원을 선투자하여 고속, 대용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전국 기간망 구축을 지원키로 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144개 지역에 대한 ATM 교환망 및 기간전송망을 확대 구축하게 된다.

선도 투자적 개념으로 통신사업자에 해당투자비를 지원하여 구축·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한 선도투자비만큼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회수하게 된다.

국가망에는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 3만여개의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155Mbps급까지의 고속, 대용량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기술개발 우선순위 조정

인력양성을 집중 지원

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이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에 달려 있음을 감안하여 98년 정보화촉진기금 전문인력양성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인력양성예산은 96년 65억원, 97년 594억원, 98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대학을 비롯, 각급 학교의 첨단실험 실습기자재 및 교수요원 확충지원을 위해 97년 104억원에서 98년 257억원으로 늘린다. 산업체 재직자의 신기술 재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97년 90억원에서 98년 207억원으로 늘린다. 여성, 신세대, 군장병 등 잠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선도투자도 98년 신규로 8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 개발 지원 확대

80~90년대초 산·학·연 협조로 전전자교환기, 국산 주전산기, CDMA상용기술 개발 등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첨단 기초기술 개발에 보다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 확보가 가능한 연구과제 발굴과 국제 공동연구 추진에 97년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외 시장수요 및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 위주로 중점 개발 지원하여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탈 방송기술, ATM교환기, PCS 등에 96년 4,360억원에서 97년 6,138억원 대폭 늘렸다.

앞으로도 시장규모가 크고 국내기술이 축적된 분야는 국내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규모가 작고 기술축적이 미흡한 분야는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97~2001년까지 국책기술개발에 1조 9천억원을 투입하고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중소기업에 2조원을 기술개발융자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촉진

디지탈기술의 발달로 통·방융합추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통합, 서비스 통합, 사업체 통합이 보편화되고 있다. 주문형비디오, 인터넷 방송 등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흐름을 반영, 미국은 1996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과 방송사업자간 상호 진입을 허용하였고 일본도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고 독일은 멀티미디어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허용, 시내전화의 가입자망 구성에 종합유선방송망은 물론 중계유선방송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ATV망으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탈 전환을 결정, 2000년 1월 1일 최초로 국내 디지탈방송을 내보내기로 하였다.

한편, 현행 이원적 규제체계가 통·방융합 추세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감안, 행정과 법령체계의 통합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였다.

SW, Contents 등 정보사회 인프라 육성

정보화의 진전과 통신망의 고도화로 컴퓨터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SW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SW산업을 크게 진흥시켜 벤처산업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삼아 최근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21세기 정보사회의 국부는 SW, Contents 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 우리는 패키지 SW, SI 등 관련서비스, DB부문을 망라하여 97년 5억불을 생산, 1억불을 수출하는데 그쳐 무역역조가 수지 흑자를 시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7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를 설치하였고, 40억원을 투자하여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대학의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설치 지원에도 20억원을 투입하였다. 해외기술과 정보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해외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98년에 설치키로 하였다.

수출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

WTO 출범과 정보기술협정(ITA) 체결로 세계정보통신시장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바뀐다. 이에 대비 정보통신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였다. 통신사업자, 기기제조업체와 중소산업체가 선단식 협력체제를 갖추고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기술인력초청, 자문인력 파견 등 해외진출 선행사업을 강화하고 EDCF 자금 등 금융·보험 지원도 확대키로 하였다.

통신장관 회담, 통신협력위 개최 등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금년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도 정보통신 분야는 96억불 흑자가 기대된다.

특히,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CDMA 통신기기를 미국, 중국 등에 9억불 수출하고, 브라질 베트남 등에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추진중이다.

정보통신분야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도 촉진하여 첨단기술확보,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특히, WLL, DVD, 2차전지 등 향후 5년내 세계시장에 신규로 등장할 유망품목을 정하여 적극 유치키로 하였다.

맺음말

위기를 기회라고도 하지만 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환율과 금리안정, 주가부양이 당면 현안이나 문제의 영원한 해결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60~70년대의 경제수준으로 소비를 줄여 나갈 수도 없다.

해결의 요체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국가사회 전반의 피나는 개혁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부문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 향후 예상되는 대량해고에 따른 실업을 벤처기업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식집약 고부가 정보통신부문에의 투자는 더욱 늘려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생에 절실히 필요한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화 투자확대로 가능하다.

90년 초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국은 GDP 성장율보다 훨씬 높게 정보화투자를 확대한 결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산업의 성장으로 매년 3%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정보화투자를 우선 줄여 GDP 성장율보다 낮은 정보화투자를 한 결과 년 1% 미만 성장의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정보통신은 97년 세계로 도약할 정책적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OECD 수준이상의 구제개혁으로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개방과 자율의 경쟁구조를 조성하였다.

98년부터 넓은 세계로 나가 21세기 정보선진한국을 이룩해 나가야겠다. 이 어려운 IMF 시대에 우리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산·학·연·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겠다.